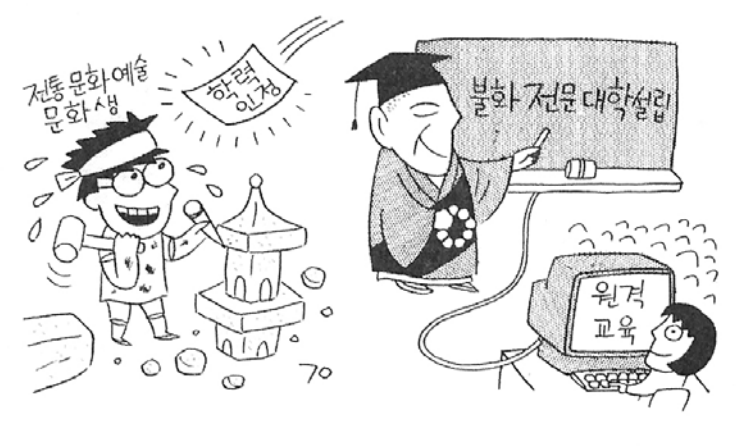


# 불교교양대 '특수전문대' 승격 가능

## 새 교육안 불교교육 체제 달라진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의 제2차 교육개혁 방안은 실업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연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각 교육과정에서 불교와 문화계에 대해 크게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교과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발달에 따라 종파별로 양성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시설·정보 및 교사양성에 중점을 둔다. 각 단계를 합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육개혁방안에서 불교계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인간문화재등 명·장인 문화생 학력 인정 방송·PC·인터넷등 통신대학 설립 가능

이와함께 첨단 정보통신매체인 방송, PC통신, 인터넷, 팩시밀리, 전자우편을 통한 원격교육매체 보유기관의 매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도 도입한다.

이와함께 첨단 정보통신매체인 방송, PC통신, 인터넷, 팩시밀리, 전자우편을 통한 원격교육매체 보유기관의 매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도 도입한다.

만 침투하면된다. 문화생제도는 우리 민족전래의 전통 문화예술(법계 불화 도자기 소리 석탑 등)에 있어 인간문화재 명인 장인에게 사사받은 개별적인 교수 학습이 불가피한 특수전문분야에서 효과적인 학습 및 능력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개방대학**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원격수업방식을 활성화하여 출석수업위주의 전통수업방식에서 방송이나 PC 통신망, 인터넷,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첨단교육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식을 도입하여 원격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는 원격 교육매체 보유기관의 교육능력을 활성화하고 첨단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데 있다.

**특성화 전문대학 설치** 한 개 또는 두개 학과로 구성된 소규모의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가정 불화전문대학 법과전문대학 전통요리전문대학 등의 형태가 그것. 특성화 전문대학은 교양이 편리하고 운동장없이 인텔리전트 빌딩만으로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과 설치, 폐과 및 학생정원운영은 자율화하여 학교운영을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과, 불화등 인간문화재 문화생들에게 학력이 인정되고 이와함께 교계 교양대학들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재편될 수 있다. 또 동국대와 불교TV가 연결된 불교통신대학 설립,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PC 통신대학 설립의 길이 열린다.

다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2차 개혁안에 따르면 문화생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학습이 불가피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학습 및 능력발전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50호 법과부문 인간문화재인 송암 벽을 일응스님(신촌 봉원사)과 48호 불화 인간문화재 만봉(신촌 봉원사) 석정(부산 선주산방) 스님 등에게 사사받을 경우 정규학력을 인정하게 된다.

# 시론 교육개혁마저 종교편향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장기간의 연구끝에 1995년 5월 31일에 제1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7개월후인 금년 2월 9일 제2차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 되었다. 제1차 교육개혁안에서는 신교육체제 구성의 배경 목표, 방안, 추진방법, 효과 등 주요 이론적 원칙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었지만 제2차 개혁안에서는 직업교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문대학원제 도입, 교육관계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불교나 기독교나 어디에 편향성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목회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 불교계통의 반발에 대한 도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글씨로 '불교의 경우는...'라고 22자를 삽입했는 뿐이다. 이것은 교육관계법 시안을 보면 명백하다. 고등교육법시안 제31조에는 '법학 외 학 신학에 있어서...'라고 되어있다. 한국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신학을 기독교의 원리라고 풀이하고 있다.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열린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개성준 등의 혁신적 개혁안이 제시되어 있어서 일단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이 개혁안 중에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부분이다.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교육학)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수준은 교양과 전문성을 구비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4년간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3년간 전문성직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불교나 기독교나 어디에 편향성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목회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 불교계통의 반발에 대한 도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글씨로 '불교의 경우는...'라고 22자를 삽입했는 뿐이다. 이것은 교육관계법 시안을 보면 명백하다. 고등교육법시안 제31조에는 '법학 외 학 신학에 있어서...'라고 되어있다. 한국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신학을 기독교의 원리라고 풀이하고 있다.

## 조기현씨 '순신 활성화 대책위' 배경

조기현씨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국신도회 재건에 나섰다. 조씨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4월 17일까지 2인 1실의 임기를 보장받고, '전신회 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씨는 이날 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신상의 사유로 불교계와 신도회에 누를 끼친 점을 생각해서 회장을 사퇴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의정직권이 없다"는 대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퇴문제를 표결에 붙여 부결시킴으로써 4월 17일까지의 임기보장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상무대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도덕적 오점을 면죄하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비판은 만기 어렵게 됐다. 조씨는 상무대사건과 관련 "불교계에 크나큰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실한 사

## '총선계기 향후재기 발판' 노림수 내부반발·조계종 외면·비난 여론등 불투명

참여한다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해 조계종 중심의 전신회 재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또 "전신회는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조계종과 관계없다 해서 전신회를 부정할 수 없다. 과거의 부정과 단절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조계종 총무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과거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유적으로 조계종 개혁 이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이에 따라 조계종총무원은 전국신도회의 대안으로 중앙신도회를 결성을 준비중이다.

그럼에도 조계종이 전신회의 재건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결성을 준비중인 중앙신도회가 최소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친여성의향의 단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쉬운 범종교적 배려

'성직자'의 통칭은 기독교계통의 종교지도자를 의미한다. 한국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에는 '성직자'를 '종교적 직분을 맡은 사람. 참고:교역자'로 되어 있고 신기철, 신용철이 펴낸 <새우리말 큰사전>에는 '성직자'를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 신부, 목사, 선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에는 '교역자'를 '예수교회에서 쓰는 단어, 교회의 종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목사, 전도사들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은 '기독교 지도자 양성 전문대학원'과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범종교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전문대학원의 설치에 해당분야의 강력한 건의에 의하여 우선 3개 분야로 한정시켰다고 할지 모르나 건의가 국가시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보다 범국민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특히 종교문제에 관해서는 과급성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정부 당국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날 우리는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全體主義)와 구별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입니다. '이것이 옳다'거나 '이것이 진리'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에서는 대중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의 종교가 중요하던 남의 종교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불교는 성불을 통하여 스스로 구원하는 길을 제시하며, 다른 종교는 유일신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구원'은 사랑과 평화와 화합의 세상입니다. 사랑이나 평화, 화합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가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한다면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상이나 종교를 배척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파와 종교단체가 있지만 스리랑카, 보스니아나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은 종교간의 극한 대립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해 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불교가 가진 자비와 화평의 포용정신은 종교간의 대립을 막고 공존 공영을 도모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종교간의 상호 인정과 존중의 풍토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사에서 종종 나타났던 불교에 대한 차별대우와 정치적 이용으로 불자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헌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시정될 일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불자들의 인식입니다.

**4월만 국민 여러분 2천만 불자 여러분!**

이번 대통령의 국방부 종교센터 중앙교회 방문 예배는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겠으나, 대통령이 이미 국민이 선출한 공인이고, 국방부 종교센터 방문은 청와대 비서실이 계획하고 슬한 언론 기관에 보도를 요청한 점에서 이미 개인 차원의 행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민주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권위주의 정부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국민들은 종교와 지역과 계층을 떠나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철저한 공인(公人) 의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특정종교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만큼, 대통령이 국군장병을 위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종교센터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지역을 떠나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철저한 공인(公人) 의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특정종교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만큼, 대통령이 국군장병을 위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종교센터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지역을 떠나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철저한 공인(公人) 의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위에서 평등한 종교 정책을 펴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최근까지 종단은 종교 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종교간의 편향 사례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사회·복지 분야 등의 각종 정책에서 있어서 종교간의 형평을 잃고 있으며, 일선 행정 집행 과정에서 많은 편향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편향된 종교정책에 대하여 정부관계기관의 고위책임자와 일선행정 책임자들의 깊은 반성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간정책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의례적인 일과성 사과 형식이 아닌 편향적 종교정책과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으로 시정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인들과 양심있는 국민들을 납득하게 하는 것은 정부당국자들의 책임임을 알고 편향적 종교정책을 시정하는데 정부당국자들은 성의있는 노력과 결과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종교 편향 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교 편향의 사례를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의 편향 사례를 시정하고, 차후에는 편향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천만 불자 여러분!**

불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차별적 종교 정책과 이번 일로 인하여 크게 상심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인내와 화평의 정진을 행하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기 위한 금강역사의 호법 천력을 세우고 부처님 정진하시기를 청합니다. 종단은 정부의 차별적 종교 정책을 바로잡고, 종교간의 화합과 공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4월만 국민 여러분!**

우리 불교는 민족의 정신 문화를 이어나 종교로서 넉넉한 품으로 역사와 민족을 깨닫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불교계가 하나 되어 추진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공정·공명선거를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며, 잘못된 과거의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분단 조국의 통일, 2002년 월드컵 유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일뿐만 아니라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망언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등 중차대한 과제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두 모아야 할 시점에서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존중과 화해 정신으로 국가와 종교가 더불어 발전하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종교의 위에서 평등한 종교 정책을 펴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최근까지 종단은 종교 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종교간의 편향 사례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사회·복지 분야 등의 각종 정책에서 있어서 종교간의 형평을 잃고 있으며, 일선 행정 집행 과정에서 많은 편향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편향된 종교정책에 대하여 정부관계기관의 고위책임자와 일선행정 책임자들의 깊은 반성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간정책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의례적인 일과성 사과 형식이 아닌 편향적 종교정책과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으로 시정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인들과 양심있는 국민들을 납득하게 하는 것은 정부당국자들의 책임임을 알고 편향적 종교정책을 시정하는데 정부당국자들은 성의있는 노력과 결과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종교 편향 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교 편향의 사례를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의 편향 사례를 시정하고, 차후에는 편향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천만 불자 여러분!**

불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차별적 종교 정책과 이번 일로 인하여 크게 상심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인내와 화평의 정진을 행하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기 위한 금강역사의 호법 천력을 세우고 부처님 정진하시기를 청합니다. 종단은 정부의 차별적 종교 정책을 바로잡고, 종교간의 화합과 공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4월만 국민 여러분!**

우리 불교는 민족의 정신 문화를 이어나 종교로서 넉넉한 품으로 역사와 민족을 깨닫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불교계가 하나 되어 추진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공정·공명선거를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며, 잘못된 과거의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분단 조국의 통일, 2002년 월드컵 유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일뿐만 아니라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망언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등 중차대한 과제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두 모아야 할 시점에서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존중과 화해 정신으로 국가와 종교가 더불어 발전하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